

민선7기 광주시정

“ ‘인사’ 낙제, ‘소통·리더십’ 부재”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5일 민선 7기 광주 시정 1년을 평가하면서 정실 인사·불통·시민 사회 소통 부재 등을 들어 혹평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 해묵은 현안 사업 해결에 속도가 붙은 점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민선 7기 광주 시정의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 사업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기간이었다”면서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한달여 동안 이용섭 시장의 시정 1년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 시장의 인사 행정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단체는 “이 시장의 인사행정은 정이롭지 않았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축소했고 추천하는 인사마다 보은·정실·캠프 인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 민선7기 광주 1년 평가 기자회견 “현안사업 해결 추진 ‘기대’...리더십 필요”

이어 “후보자들의 능력·도덕성 등이 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 시장은 시의회·시민사회·언론의 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했다”며 “촛불로 탄핵한 정부에 걸맞지 않고 시대 정신을 저버린 인사였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 사회와의 소통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시민사회와의 소통, 정례화와 제도화 노력에 소홀했다”면서 “이 시장은 시민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 소통은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광주시정의 리더십은 시 공직자들이 아닌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의 리더십 ‘실종’과 비전

부족의 예로는 청년정책과 복지정책이 꼽혔다

단체는 “이 시장의 청년정책 예산의 70%가 일자리 관련 예산이다”면서 “취임 당시 청년 일자리 정책, 풀이있는 청년 정책, 청년문화 등 여러가지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청년정책 예산은 제자리다.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평가할 것조차 없다”고 성토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광주복지재단이 복지정책의 허브로서 역할과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복지정책을 마을 단위 공동체와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대안이 없

다”고 밝혔다

시정이 ▲도시철도 2호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형 일자리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등 민선 5·6기 해묵은 현안 해결에만 급급한 점도 지적됐다

반면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추진은 호평했다

단체는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 6기 때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받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진되면서 타결된 점은 지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생산 자동화 관로 확보, 공정한 예산 집행 등을 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목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맥쿼리사외의 광주 제2순환도로 계약 이후 시 재정 투입,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잡음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전남북·제주 공사장 121곳 추락 예방 조치 소홀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중소 규모 건설 현장 172곳에 대한 추락 방호 조치 감독을 벌인 결과 1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 가운데 작업 발판·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 공사장 121곳에 사나흘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육을 소홀히 한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은 연말까지 추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군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항소심서 감형받아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과 1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과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에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당시 23·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지인들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미평한 직업이 없었던 C씨는 청소와 걸레지 등 집안 살림을 맡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 집안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숨진 날 당일에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km가량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살해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단순히 기절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A씨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나주혁신도시 한 공기업 상임감사 ‘성희롱 의혹’

나주혁신도시 내 한 공기업 상임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조합이 해임을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A공공기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상임감사 B씨의 인사전환 및 여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B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조합원들을 상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고충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조합원에게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여직원이 다수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우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노조차원에서 가능한 모두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희롱 건과는 별건으로 상임감사 B씨의 부적절한 인사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노조 측은 B씨가 내부 인사 규정과 여러 가지 관례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담긴 문건을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했다



폭염주의보에 그늘이 최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모퉁이 아래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 “노동 탄압 문재인 정부 상대 총력투쟁”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5일 문재인 정부를 노동 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구속 돌지 석방, 문제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5·18 망언에 항의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더니 김명환 위원장을 기소했다. 이는 노동 탄압 선언이다. 정부의 ‘노동 존중’은 폐기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를 천명한다

약속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촛불 정부를 지킬 수 없게 된 현 정부는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에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캐스팅 동결 풍선을 띄우며 속도 조절을 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월 국회 개원에 맞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사전 조치라

며 “위원장 구속 상황에 비상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조직해 투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하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은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 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우겠다.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달 18일 총파업대회를 연다. 노동 기본권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3.0

국민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